

손 놓은 건설현장... 일자리 끄긴 인부들 '배부른 파업' 비난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2주째를 맞이하면서 산업계 곳곳에 피해가 늘고 있다. 유류 공급의 차질은 당장 기름 회전율이 높은 서울을 시작으로 지방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시멘트 공급도 문제가 생기면서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형 건설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남중수 기자/뉴시스

2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 경제위기 '경고등' 장기화 되면 큰일... 이 겨울 어떻게 버틸지 눈앞 '감감'

〈1면에서 계속〉 그러면서 이 지역은 기름 회전율이 서울에 비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며칠 더 버틸 수 있다지만 정유사에 요청한 지난 금요일(2일)까지 기름이 오지 않는다면 휘발유 판매는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주유소에 유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기존 외상 고객을 대상으로 혹은 거래처 수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어떤 주유소는 얼마 남지 않은 기름을 기존 외상업체 등에 팔거나 거래처 공급량 확보를 위해 기름 가격을 인상하는 곳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름값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주

유소를 찾는 일반 고객들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기름 가격 인상을 통해서라도 유지하던 휘발유도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서울에 이어 비수도권 지방 지역의 휘발유도 결국 동이 날 상황이라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같은 지역의 주유소 업자 B씨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장기화로 기름을 못 팔고 장사를 못하게 되면 이걸 누가 책임져 주느냐"며 "비교적 기름 회전율이 떨어지는 이곳만 해도 1주일 장사로 팔지 못하는 매출이 역대에 달한다. 적정선에서 파업을 멈추고 노·정 간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공급 차질로 건설현장 잦아들... 건설사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일 못해 피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로 시멘트 등 건설 자재도 공급 위기가 오면서 건설업체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시멘트 운송 중단으로 레미콘 타설(콘크리트)을 거꾸집에 붓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해 건설 현장이 멈춘 곳이 속출하는 등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건설사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날 오후 기준 전국 912곳 건설 현장 중 55.7%인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29일부터 레미콘 생산이 전국적으로 중단돼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 멈출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업장도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현

장에 레미콘 입고가 안 돼 다른 대체 공정으로 돌린 상태"라며 "지금은 형틀과 철근 공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건설산업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5%, 레미콘은 30%가량만 출하되고 있다"며 "금일부터 건설현장 공사 중단 피해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중소기업의

건설업체들에게도 피해가 나오고 있다. 강북에서 건설업을 하는 C씨는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C씨는 "현재 강북 지역에서 2군데 공사를 진행 중인데 시멘트 공급이 어려워져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지 못해 공기를 맞출 수 없어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C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주변 동종 업계에서는 현재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과 함께 파업이 폭어 더욱 장기화 될까 다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며 "하루 빨리 파업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건설 현장 잦아들... 건설사뿐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콘크리트 타설공·철근 콘크리트공 등의 현장 노동자들 역시 공사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 조장"

부회장단 "법인정성 크게 침해" 국민 80% '손배 면책' 반대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최근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기연)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은 11월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회견을 통해 "개정안은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



이동근(오른쪽 첫번째)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을 보호하게 돼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5일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반대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지난달 25~30일 성별·연령별·직업별·지역별로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에 응답자의 80.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이사업자의 반대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법 2조 개정에는 응답자의 67.1%가 반대했다. 이처럼 법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고 법질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만큼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와 강행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다.

한편 논란의 대상이 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경제계는 반대 여론에도 거대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다름과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해결의 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길입니다.

자율 균형 미래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